

‘편향·왜곡’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정치권 논란 ‘100일 정기국회’ 개최

문광위 야당 의원들 “친일·독재 미화...검정 취소해야”

광주시교육청 “5·18관련 신군부 발표 누락 강력 대처”

주요 집필자 및 명이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집필 과정에서부터 우편향적 시각이 반영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교과서 역사교과서가 지난 30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심의를 최종 통과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 검정합격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균형적 시각이 투영됐다고 찬사를 보내는 등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역사 교과서의 채택에 있어서는 균형있고 건전한 역사인식에 적합한지를 가장 우선해 판단해야 함에도, 교과서 교과서가 과연 이런 기준에 입각해 검정심사가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교과사 교과서는) 평화·인권·민주주의·다문화·환경·공존 등의 미래지향적 가치가 구현되어야 할 시대에 반북과 반공논리 주입을 일관되게 강요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들에 따르면 이 교과서는 심의과정에서 표현표기 수정요구를

제외하고도 479개나 내용의 수정요구를 받았고, 집필자 스스로 248개나 수정했으며, 최종 제출본에서도 83개를 자체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만 무려 810개에 달했다.

또 이 교과서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시민을 향해 발표한 사실 등이 누락됐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

는 지도자’로, 1972년 10월 유신도 ‘비상 체제’라고 그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 시절 학원 및 언론탄압 등 반민주적 행태는 거의 기술하지 않았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제 정세의 판단에서 놀라운 정도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다”고 찬양했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폄하하거나, 그 성과를 무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들은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정합격 취소 ▲이를 통과시킨 국사편찬위원회의 체재포

와 회의록 일체 공개 ▲왜곡된 교과서 논란 관련한 교육부 장관의 사과 및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민주주 대변인은 “교과서는 전문가인 학자들이 학문적 시각을 담아 기술하고, 위원회도 최종 통과하기까지 철저히 심의했음”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잡힌 역사관이 투영됐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일 ‘우 편향 역사교과서 국사편찬위 검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 교과서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표방하며 교과서 채택 저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신군부가 시민에게 발표한 사실 등을 언급하지 않고 처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기술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축소·왜곡· 폄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역사왜곡대책회의, 역사교사모임,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전국적인 차원에서 우편향 교과서 채택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일선 학교의 교과서선정 심의위 단계에서 이를 채택하지 말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교문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출신 역사학자들이 집필했다고 해서 출간되기도 전에 거센 논란에 휘말린 교과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들어보이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자문 지방자치발전추진위원회 발족

추대위원장 심대평...오재일 교수 등 민간위원 24명 선임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추진위원회 24명을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위원장에는 심대평(72) 전 충남지사가, 부위원장에는 권경석(67) 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위촉됐다.

청와대는 심 위원장에 대해 “관선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민선 충남지사 등을 지낸 지방행정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며 총리실 행정조정실장과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등 국정 경험에, 재선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등 풍부한 정치경험을 두루 갖춰 정부의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임자”

라고 소개했다. 지방위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그 추진상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위는 지난 5월에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 새로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안정행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 외에 민간위원 24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대통령 추천 6명, 국회 의장 추천 10명, 지방 4대 협의체장 추천 8명으로 하되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오재일(61)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국회의장 추천으로 민간위원에 포함됐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인사기준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서 지방자치 발전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뿐 아니라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지방선거 정책개발 전국 순회 토론회

오늘 광주시당 첫 개최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임내현)은 3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주관으로 ‘2014년 지방선거 정책개발을 위한 전국 순회-광주지역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양승조 지방선거기획단장(최고위원)과 이용섭 광주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및 당직자·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김일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광주발전 미래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 이어 임우진 전 광주시행정부시장(행정 분야), 김봉

진 광주발전연구원(균형발전 분야), 임낙평 광주·전남환경연합의장(환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이 분야별 발제 등으로 진행된다.

임내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정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인 만큼 어느 지역에 비해 기대가 크며,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정책 마련에 있어 보다 많은 노력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야 의사일정 합의 못해 초반부터 파행 운영 불가피

새 정부 첫 국정감사·새해 예산안 싸고 힘겨루기 예상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2013년도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여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개회되지만, 민주당의 장외 투쟁 속에 아직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기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채 초반부터 파행 운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사태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은 분리해야 할 문제라며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만,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와는 별개로,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강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정기국회 가 사실상 초반부터 파행을 빚는 것과 관련, “여야의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 장외투쟁이 선 저의 마음은 한없이 착잡하고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하다”면서 “아직 정기국회 100일의 시간표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작년 세입세출 결산은 순도 내지 못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수행하는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면서 “지금부터는 국민의 상식을 따르는 편이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정가

도의회,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정부지원 촉구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2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정부지원 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대수 의원(민주·여수)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수박람회개 폐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엑스포장 민간매각에 의한 선풍적

금 회수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사후활용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계 104개국, 10개의 국제기구와 약속한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를 조속히 실천하라”며 촉구했다.

한편, 이 촉구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 광주은행장 내정 우려 표명

광주시의회는 2일 신임 광주는 행장 내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설명을 발표하고 “광주시민은 현재 진행 중인 광주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지역민들의 애정과 회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광주은행을 되찾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이에 부응하는 정부의 우선 정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그러

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과 귀를 닫은 채 원천 고수만을 밝히고, 조직 내부는 물론 지역의 염원을 알 리 없는 인사를 뒤늦게 은행장으로 내정함으로써 그동안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열망해온 광주시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3년 10월 0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메디컬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라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1층 브랜드커피숍 계약완료! 2층 레스토랑 카페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널드) 70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2층 PC방 203P
지상1층 지상1층 후대판매장 22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